

# 우리 사회의 반자본주의 : 원인, 결과, 대책

자유와 시장 Journal of Freedom and Market

전 용 덕\*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내리리 15번지(e-mail: ydjeon@daegu.ac.kr)

\*\* 부경대 유동운 교수의 논평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그리고 익명의 두 논평자에게도 매우 감사드린다.



이 글의 목적은 우리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반자본주의의  
원인과 결과를 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제안하는 것이다. 한 사회의 친  
(親)자본주의 또는 반(反)자본주의는 기업과 경제의 장기적인 경제성장을  
결정짓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불행하게도 작금의 우리 사회의  
반자본주의는 임계점을 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제성장률이 장기적으  
로 하락하고 있음이 그 점을 잘 보여준다. 이 연구의 결과가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번영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심리와 제도를 다듬는데 도움이 되  
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반자본주의, 정부, 개인, 경제성장, 간섭주의

## I. 우리 사회의 반자본주의: 그 심각성의 한 단면

한 사회의 친(親)자본주의 또는 반(反)자본주의는 기업과 경제의 장기적  
성장을 결정짓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반자본주의는 임계점을 넘고 있다는 생각은 필자만의 기우일까. 이  
글의 목적은 우리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반자본주의의 원인  
과 결과를 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제안하는 것이다.

작금의 우리 사회의 반자본주의는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가? 우리 사회  
의 반자본주의의 정도는 심각하다고 판단되지만 불행히도 그 수준을 객관  
적 자료나 지표로 보여줄 수는 없다. 다만 그 심각성은 아래에서 반자본주  
의의 원인, 결과, 대책 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사람의 생명과 재산 등을 보호하고 사회의 질서를 확  
립하는 데 있어서 최후의 보루라고 여겨져 온 사법부의 최근 판례 하나를  
간략히 검토함으로써 작금의 우리 사회의 반자본주의의 심각성을 짐작해

보기로 한다.<sup>1)</sup>

지난 2004년 대법원이 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라는 판결을 했다.<sup>2)</sup> 대법원은 ‘구직중인 여성 노동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노동조합설립 신고를 반려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하는 판결을 했다.<sup>3)</sup> 이것이 소위 ‘실업자의 초(超)기업단위 노조가입 문제’이다. 실업자의 초기기업단위 노조가입 문제란 기업별 노동조합에서 해고되어 구직중인 자가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을 허가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말한다. 이 문제가 불거진 것은 앞에서 지적하였듯이 지난 2004년 대법원 판결에서 비롯되었다. 그리고 현재 실업자의 초기기업단위 노조가입을 허용할 것인가를 두고 재계와 노동계가 대립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업자 노조 가입 문제는, 한 마디로, 지난 2004년 대법원이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에는 실업자 또는 구직중인 자도 포함된다고 판시한 판결에서 비롯된 것이다. 대법원은 판결 이유에서 “일정한 사용자에의 종속관계를 조합원의 자격 요건으로 하는 기업별 노동조합의 경우와 달리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노동조합 등의 경우에는 원래부터 일정한 사용자에의 종속관계를 조합원의 자격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닌 점에 비추어”라고 함으로써 다분히 법률의 ‘형식 논리’에 의거하여 판결한 것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대법원의 판결대로라면 임금을 대가로 한 번이라도 노동을 한 사람은 실업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두가 노동자가 되는, 그래서 그 노동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매우 이상한 결과가 나오게 되기 때문이다. 비록 이 때 노동조합이라는 것이 기업별 노동조합이 아니라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노

1) 헌법재판소의 반자본주의적 판결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김영용, 김정호, 전용덕 공저, 『헌법재판소 판례연구』, 자유기업원, 2003을 참조.

2) 이 부분은 전용덕, “실업자 노조 가입 안 된다”, 자유기업원, Viewpoint(2008. 5. 29)의 일부를 발췌하여 수정한 것이다. 자세한 분석은 앞의 글을 참조.

3)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두8568 판결.

동조합이라는 점이 다르기는 하지만 말이다.

그러나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고용주에게 노동을 제공하지 않는 실업자 또는 구직자가 노동자가 될 수는 없다. 어떤 이가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것도 자신의 노동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사용자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산업별·직종별·지역별로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그런 노동자의 권익을 대규모 단위의 집단적인 행동으로 보호(?)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게 된 것은 정치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위의 사례는 사법부가 다분히 법률의 형식 논리에 의거하여 실업자에게 노동조합의 가입을 허용할 것을 판결한 것으로 사법부의 반자본주의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법률의 형식 논리가 무엇이든 재판관들이 친노동조합, 즉 반자본주의 심리를 가지지 않았다면 그런 형식 논리에 빠지는 일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위의 사례는 근래에 사법부가 내리는 많은 판결의 한 예로써 사법부의 반자본주의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지금 우리 사회의 반자본주의를 거론하는 것은 직접적으로는 2008년 4월 삼성 그룹의 경영쇄신안 발표와 이건희 회장의 전격사임에 자극받은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반자본주의는 우리나라의 사회·경제 환경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사법부 판례에서 보듯이 작금의 우리 사회 전반에서의 반자본주의의 심각성이 우려할만한 수준이라는 점에서 객관적 분석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반자본주의를 거론한다는 점을 명확히 해둔다.

어느 사회나 반자본주의적 심리, 행위, 제도 등이 작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 논의하고 있는 반자본주의에 대한 원인, 결과, 대책에 대한 내용은 다른 사회에도 거의 그대로 적용 가능하다. 물론 사회

마다 고유한 특징이나 문화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편차는 있겠지만 말이다. 그리고 한 사회의 반자본주의적 심리, 행위, 제도를 모두 분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연구자의 한계도 있을 뿐 아니라 반자본주의적인 것이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반자본주의적인 것이 새롭게 만들어지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 연구의 결과를 이용하여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번영하는 사회를 만들기를 희망한다.

반자본주의의 심리적 원인을 밝힌 고전으로는 미제스의 『자본주의 정신과 반자본주의 심리』, Hayek(1978) 등이 있다.<sup>4)</sup> 우리 사회의 반자본주의 문제를 광범위하게 다룬 문헌으로는 공병호의 『시장경제와 그 적들』이 있다.<sup>5)</sup> 우리나라 지식인들의 자본주의 비판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김영용, 안재욱, 전용덕 공저 『지식인과 한국경제』가 있다.<sup>6)</sup> 사법부의 반자본주의적 판례를 다룬 문헌으로는 김영용, 김정호, 전용덕 공저 『헌법재판소 판례연구』가 있다.<sup>7)</sup> 사회 철학적 관점에서 반자본주의 이념을 비판한 최근의 서적으로는 민경국의 『자유주의의 지혜』가 있다. 기타 반자본주의적 심리, 행위, 제도 등에 대한 문헌은 필요시마다 관련된 부분에서 소개하고자 한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글에서 사용하고 있는 몇 가지 중요한 이념 또는 용어를 간략히 설명하고자 한다. 자본주의란 자산의 사적 소유와 자유 계약의 원칙을 운행 원리로 하는 경제 체제를 말한다.<sup>8)</sup> 자본주의를 경제 체제로서 채택하는 정치철학을 리버테리아니즘(libertarianism)이라고 일컫는다. 다르게 말하면, 리버테리아니즘이란 개인의 생명, 재산, 자유 등

4) 미제스, 루트비히 폰, 『자본주의 정신과 반자본주의 심리』, 김진현 역, 한국경제연구원, 1984와 F. A. Hayek, *New Studies in Philosophy, Politics, Economics and the History of Ideas*,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8.

5) 공병호, 『시장경제와 그 적들』, 자유기업센터, 1997.

6) 김영용, 안재욱, 전용덕 공저, 『지식인과 한국경제』, 자유기업원, 1999.

7) 김영용, 김정호, 전용덕 공저, 『헌법재판소 판례연구』, 자유기업원, 2003.

8) 자산의 사적 소유가 자유 계약의 원칙보다 선행하는 원리이기 때문에 후자가 전자를 보조하는 제도이다.

을 최우선시하는 정치철학으로서 개인의 생명, 재산, 자유 등을 억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실제로 억제해온 정부를 매우 작게 하여 개인의 자유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정치철학을 지칭한다. 리버테리언리즘에서 정부는 치안과 국방의 생산만을 책임지거나 치안과 국방의 생산마저도 민간이 자율적으로 하는 체제로 구분할 수 있다. 흔히 전자를 ‘작은 정부’를 이상으로 하는 체제라고 부른다. 치안과 국방을 집단적으로 생산하는 것을 인정하지만 국가의 강제가 아닌 민간의 자발에 의해 생산하는 상태의 정치 체제를 뒤에서 언급하는 ‘자연적 질서’(natural order)라고 부른다. 반자본주의는 자산의 사적 소유와 자유 계약의 원칙을 부정하는 체제를 총칭할 때 쓰는 용어이다. 복지사회주의, 조합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등이 있다. 개인보다는 집단을 중시하는 이념이 집단주의이고 그와 반대로 개인을 중시하는 이념이 개인주의이다. 자본주의는 개인주의를 기초로 하고 있지만 반자본주의는 통상 집단주의를 기초로 하여 사회의 틀을 짜고자 하는 사회철학이다.

## II. 우리 사회의 반자본주의: 그 원인

우리 사회의 반자본주의의 원인들을 모두 분석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모든 원인들을 분석하기보다는 주요 원인만을 다루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원인들은 통계 자료나 수치로 객관화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는 점을 미리 지적하고자 한다. 다시 말하면, 반자본주의의 원인에 대해서는 문헌이나 필자의 직관에 의존하여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객관성에 있어서 한계가 있음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이 연구를 바탕으로 차후의 연구가 더 객관화된 내용이 되기를 기대한다.

이제 반자본주의의 원인들을 자세히 분석하기로 한다. 첫째, 지식인들과 일반인들의 반자본주의 심리가 반자본주의의 원인이다. 그런데 지식인들과 일반인들이 어떻게 반자본주의 심리를 가지게 되는가? 미제스는 『자본주의 정신과 반자본주의 심리』에서 지식인들의 반자본주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sup>9)</sup> “교수들, 노동조합의 지도자들, 그리고 정치인들은 최악의 착취자는 대기업이라고 말한다. 대기업의 특징이야말로 대중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대량생산이라는 점을 모르는 것이다.”<sup>10)</sup>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는 미제스의 지적과 같이 교수들과 교사들, 노동조합의 지도자들, 정치인들, 일부 종교 지도자, 저술가들, 정부의 공무원들 등이 대기업 중에서도 특히 복합기업(conglomerate), 일명 재벌에 극도의 반감을 드러내왔다.<sup>11)</sup> 이들은 자본주의를 비난하면서 그 비난의 중심에 재벌이 있다고 주

9) 유동운 교수는 필자의 논문에 대한 논평문에서 미제스가 『반자본주의 심리』를 발표한 다음 해, 즉 1958년에 독일의 심리학자 하이더(F. Heider)가 귀인이론(attribution theory)을 발표하였다고 지적했다. 귀인이론이란 사람들은 자신의 처지를 내적요인보다 외적요인으로 돌리는데 익숙하다는 이론이다. 하이더의 이론을 반자본주의에 적용하면, 인간의 본성이 바뀌지 않는 한 반자본주의는 자본주의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닐 것이라고 유동운 교수는 주장했다.

10) 미제스, 루드비히 폰, 『자본주의 정신과 반자본주의 심리』, 김진현 역, 한국경제연구원, 1984, P.191에서 인용.



장한다.<sup>12)</sup> 그러나 복합기업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존립한다.<sup>13)</sup> 복합기업도 다른 기업과 같이 소비자에게 봉사하는 조직이라는 점에서 다른 기업과 큰 차이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나라에서 복합기업이 존재할 뿐 아니라 복합기업에 대한 비판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우리나라 지식인들의 복합기업에 대한 비판은 한국에만 고유한 현상이라고 해도 무리가 없다. 그리고 그 비판이 거의 대부분 근거 없는 것임도 분명한 것처럼 보인다.

많은 지식인이 중소기업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다. 그에 따라 정부도 최근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복합기업 또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오히려 규제를 늘려 왔다. 기업이나 경제 주체에 대한 각종 지원도 규제의 일종이다. 정부의 지원이 간섭주의의 한 형태라는 점에서 중소기업을 지원하자는 주장은 반자본주의적인 것이다. 중소기업을 지원하자는 주장은 복합기업에 대한 반자본주의 심리가 반대로 작용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하자는 주장도 그 뿌리는 반자본주의 심리에 있다는 것이다. 소비자에게 봉사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복합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차이가 없다. 기업의 크기만 다를 뿐이다. 복합기업에 비판적인 태도도 문제이지만 중소기업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도 반자본주의 심리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

그러면 지식인들이 왜 반자본주의 심리를 가지게 되었는가? 미제스는 『자본주의 정신과 반자본주의 심리』에서 그 원인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 
- 11) 우리나라 지식인들의 반자본주의 심리에 의한 재벌 비판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김영용, 안재욱, 전용덕 공저, 『지식인과 한국경제』, 자유기업원, 1999를 참조.
  - 12) 한국 경제에서 재벌의 비중을 고려한다면 재벌에 대한 비판은 사실상 기업에 대한 비판으로 간주해야 한다. 그리고 기업은 자본주의의 꽃으로 비유될 정도로 자본주의에서 중요한 조직이다.
  - 13) 복합기업의 발생 동기에 관한 연구 중의 하나인 Jeon, Yoong-Deok and Young-Yong Kim, "Conglomerates and Economic Calculation", Quarterly Journal of Austrian Economics, vol. 7, No. 1, Spring 2004, pp.53-64와 앞의 논문에 포함된 참고 문헌을 참조.

자본주의에서 지식인들은 서로 경쟁하고, 서로의 능력과 재능에 따라 등급이 매겨지기도 하며, 심지어 위계질서가 만들어지기도 한다. 지식인들은 그런 경쟁에서 자신들보다 성공한 동료, 동기동창, 친구 등의 우월함을 보며 초조해 한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좌절감과 굴욕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낼 수 없다. 만약 그렇게 하면 그들의 태도가 아주 틀려먹은 것으로 간주되고 모든 사람 앞에서 자신의 가치가 저하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분노를 다른 대상으로 돌려야 한다. 결국 그들은 사회의 경제 체제, 즉 자본주의 체제를 사악한 것으로 고발한다. 이 부당한 체제만 없었다면 그들은 그들의 능력과 재능, 열성과 업적에 따라 지금보다 더 많은 보상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 마디로, 지식인들의 반자본주의 심리는 자본주의 체제에서 자신보다 성공한 동료, 친구, 동기동창에 대한 좌절감과 굴욕감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미제스는 지식인들의 반자본주의 심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지식인의 자본주의에 대한 혐오감을 이해하려면 자본주의라는 제도가 그들의 야망을 좌절시킨 원흉이라고 증오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그들의 [자본주의에 대한] 혐오감은 단지 일부 성공을 거둔 ‘동료들’에 대한 자신의 증오감을 감추는 눈가리개임을 깨달아야 한다.”<sup>14)</sup>

대의 민주주의 하에서 지식인은 사회의 여론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거나 때로는 결정적 역할을 한다. 그 점에서 지식인의 반자본주의 심리의 원인을 분석하는 일은 필요하다. 그러나 대의 민주주의 하에서 일반인의 반자본주의 심리와 그 원인을 다루는 일도 중요한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sup>15)</sup> 미제스는 『자본주의 정신과 반자본주의 심리』에서

14) 미제스, 루드비히 폰, 『자본주의 정신과 반자본주의 심리』, 김진현 역, 한국경제연구원, 1984, P.167에서 인용. 괄호 안은 필자가 추가한 것이다.

15) 지식인과 일반인이 가진 반자본주의 심리와 그 원인이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미묘한 차이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둘을 분리하여 설명했다.

그 원인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sup>16)</sup> 자본주의 하에서 많은 사람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자본주의가 각자에게 바람직한 지위에 도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지만 실제로 소수의 사람만이 그런 지위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자신보다 더 성공한 사람을 보면서 그들의 잠재의식 속에 열등감을 갖게 된다. “이것이 바로 뜨내기 인부들이 정규수입을 가진 자들에게 보이는 태도이고, 공원이 조장에게, 간부직원이 부사장에게 보이는 태도인 것이다.”<sup>17)</sup> 크게 성공한 사람들을 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존심에 상처를 입는다. 그러한 사람들은 스스로를 위로하기 위해 책임을 전가할 곳을 찾는다. 자신의 잘못으로 실패한 것이 아니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려고 한다. 그들은 자신을 다음과 같이 변명한다. 자신이 실패하거나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성공하지 못한 것은 성공한 사람에 비해 재능, 근면 등이 부족한 것이 아니다. 그가 실패한 것은 정직하기 때문이고 성공한 그의 상대는 속임수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자본주의 하에서 사람들은 미덕과 빈곤, 악덕과 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자신은 다행히도 미덕과 빈곤을 선택하고 악덕과 부를 거부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책임 전가는 모든 사람을 사회복리에 공헌한 정도에 따라 대우하는, 따라서 각자가 자신의 행운을 책임지는 사회질서 밑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취하는 태도이다. 그러한 사회에서는 야망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들보다 더 훌륭하게 성공한 모든 사람들의 행운을 불쾌하게 여긴다.”<sup>18)</sup>

둘째, 하이에크는 인류의 진화 역사에서 획득한 ‘원시적인 본능’이 반자본주의의 근원이라고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오늘날 이와는 반대로 서구 사회에서는 대규모 조직들의 구성원으로서 자라나는 인간들의 수가 점차

16) 미제스, 루트비히 폰, 『자본주의 정신과 반자본주의 심리』, 김진현 역, 한국경제연구원, 1984, pp.160-165 참조.

17) 미제스, 루트비히 폰, 『자본주의 정신과 반자본주의 심리』, 김진현 역, 한국경제연구원, 1984, P.162에서 인용.

18) 미제스, 루트비히 폰, 『자본주의 정신과 반자본주의 심리』, 김진현 역, 한국경제연구원, 1984, P.164에서 인용. 괄호 안은 필자가 추가한 것.

증가하고 있다. 이것은 개방된 대규모 사회를 가능하게 해주었던 시장의 규율들이 그들에게 낯선 것들이라는 의미이다. 그들은 시장경제를 거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시장경제가 기초하고 있는 규율들에 의해 생성되는 결과들을 불합리하고 비도덕적인 것으로 생각한다. 그들은 빈번히 시장경제에서 사악한 권력에 의해 유지되는 자의적인 구조만을 보고 있다.

그 결과 오랫동안 억압되었던 원시적인 본능이 또다시 표면에 나타나게 되었다. 정의로운 분배에 대한 요구 및 누구에게나 그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것을 할당해주는 조직화된 권력에 대한 요구는 정확히 이러한 원시적 본능에 기초를 두고 있는 격세유전이다. 의도적으로 새로운 사회질서를 형성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진 예언자, 도덕철학자 및 구성주의자들은 현재 유행하고 있는 바로 이러한 감정에 의존하고 있다.<sup>19)</sup>

하이에크의 지적을 요약하면, 인류가 시장경제가 출현하기 이전까지 수 천 년 간 소규모의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고, 그런 공동체 사회의 운영원리는 혈연 또는 지연이다. 그러나 시장경제를 기초로 하는 거대사회의 운영원리는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하는 경쟁이다. 하이에크는 오늘날 많은 사람이 두 사회의 운영원리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거나 전자에 익숙해져서 후자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하이에크는 인류의 진화 역사에서 인류가 공동체 사회에 적응한 역사가 매우 길고 바로 그 이유로 그 때 획득한 원시적 본능 때문에 아직도 인류가 자본주의라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셋째, 우리 사회의 집단주의는 반자본주의의 한 원인임에 틀림없다. 집단주의는 자본주의의 기초가 되는 개인주의의 대척점에 있다. 경제 문제를 포함한 모든 문제를 개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집단적으로 해결하고자 하

---

19) Hayek, F. A. *New Studies in Philosophy, Politics, Economics and the History of Ideas*,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8, 민경국 편역, 『자본주의냐, 사회주의냐』, 문예출판사, 1990, P.27에서 인용.

는 것이 집단주의 사고방식이다. 우리 사회의 집단주의는 모든 문제를 개인보다 정부가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 잘 나타난다. 몇 년 전 화물연대 가입 운전자들이 화물의 운송을 공동으로 거부했던 적이 있다.<sup>20)</sup> 이 때 시장에서 화물 운송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결과로 빚어진 화물차 운전자의 수익 저하를 화물연대의 노동조합 인정, 정부 차원에서의 각종 해결책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결하고자 했다. 한 마디로, 수익 저하라는 화물 운전자 개인의 문제를 집단행동을 통해 집단의 문제로 전환한 것이다. 정부도 그것이 순전히 개인적인 문제라는 주장을 펴기보다는 집단적 해결을 요구하는 운전자들의 요구를 대부분 받아들였다. 그 결과 대부분의 해결책은 국민의 부담이 되어 왔다. 물론 집단주의가 언제나 나쁜 것은 아니다. 2002년 월드컵 경기 때 보여준 많은 국민의 집단적 행동은 한국 축구팀이 4강까지 오르는데 상당히 기여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집단주의가 경제 문제에 적용될 때는 거의 언제나 나쁜 결과를 초래한다. 이해 집단이 민주주의의 절차를 이용하여 경제 정책 입안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특히 그러하다. ‘자산에 대한 개인의 지배’로 정의되는 자본주의는 집단주의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넷째, 우리 사회의 팽배한 민족주의가 반자본주의의 원인이다. ‘신토불이’, “우리 것은 좋은 것이야” 등과 같은 문구는 ‘민족주의’를 자극하는 말이다.<sup>21)</sup> 대외 경제 관계에서 민족주의는 다른 나라에서 생산된 재화를 배척하는 쪽으로 작용한다.<sup>22)</sup> 왜냐하면 민족주의의 요체는 배타성이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대외 경제 관계에서 민족주의는 자유무역보다는 보호무

20) 화물연대의 집단행동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전용덕, “화물연대의 집단행동: 오류, 원인, 그리고 과제”, 한국 하이테크 소사이어티 편, 『기업과 정부』, 평민사, 2004를 참조.

21) 민족주의는 집단주의의 한 형태이기 때문에 집단주의에서 다루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경제적으로는 민족주의가 대외 경제 관계에 특히 작용하기 때문에 집단주의와 분리하여 다루었다.

22) 민족주의는 정치적으로는 전쟁, 침략, 지배 등의 결과를 초래한다. 히틀러 시대의 독일은 민족주의가 심지어 유대인의 인종 말살로 이어졌다.

역을 선호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민족주의는 그 어느 때보다도 그 파고가 높다. 어느 나라나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성공하여 자심감이 생기면 민족주의가 점증하는 것처럼 보인다.<sup>23)</sup> 민족주의가 좋은 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자유무역보다는 보호무역을 선택할 정도가 되면, 즉 경제 관계에서 외국을 배척할 정도가 되면 문제가 작은 것이 아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민족주의는 반자본주의의 원천이 된다. 민족주의는 보호무역을 통해 자국 경제 주체들을 보호하고 외국 경쟁자의 경쟁 압력을 억제함으로써 경제의 생산성을 떨어뜨린다. 문제는 민족주의가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의 수준인가 하는 것을 객관화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농수축산물에서 특히 민족주의를 강조하는 문구가 많이 눈에 띈다. 우리나라 농수축산물의 가격이 동일한 재화의 수입품 가격보다 높다는 것은 농수축산물에서 민족주의가 강하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이다. 그리고 일부 언론은 민족주의를 자극하거나 온존하게 만드는 문구나 드라마 등을 지속적으로 송출한다. ‘전원일기’, ‘대추나무 사랑 걸렸네’ 등이 좋은 예이다. 다른 나라와의 경제 관계에서는 민족주의가 반자본주의의 뿌리임이 분명하다.

다섯째, 우리 사회는 역사적으로도 반자본주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여기에서는 우리 사회만이 안고 있는 반자본주의의 역사적 뿌리를 찾고자 한다. 자세한 논의에 들어가기 이전에 먼저 미체스가 지적한 반자본주의 심리, 민족주의, 집단주의 등은 개인적 차원에서의 반자본주의의 원인들이라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면, 반자본주의의 원인들이 ‘내생적’이라는 것이다. 아래에서 서술할 공자와 맹자(이하 공맹이라 칭함)의 철학과 제3·5공화국의 스테티즘(statism)은 당시의 정치세력이 통치를 위하여 도입한 이념이라는 점에서 ‘외생적’이라는 것이다.<sup>24)</sup> 그러나 공맹

23) 이 부분은 좀 더 자세한 연구가 필요하다.

24) 현재 스테티즘을 ‘국가주의’라는 말로 번역하고 있으나 그런 번역에는 국가를 목적으로 개인을 그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삼는다는 의미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너무 불완전한 번역으로 여겨진다. 그렇기 때문에 필자는 발음 나는 대로 표기했다.

의 철학은 장구한 세월로 인하여 상당 부분 내생적인 것과 같은 상태라고 하겠다.

반자본주의의 역사적 뿌리는 장기적인 것과 단기적인 것이 있다. 먼저 장기적인 것을 보기로 한다. 조선 왕조 오백년 동안 공맹의 철학을 통치의 기본 이념으로 한 결과는 어떠했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당시 사회의 기본 중에서도 기본이 되는 소프트웨어였던 공맹의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濟家治國平天下)라는 가르침을 돌로 나누어 볼 필요가 있다. 전 반부의 ‘수신제가’는 개인의 삶에 적용되는 것으로 매우 유용한 가르침이다. 그리고 그것은 현재도 여전히 유용함을 부인할 수 없다. 후반부의 ‘치국평천하’는 나라를 다스려 세상을 안정시킨다는 뜻으로 이 부분이 간섭주의적 정부를 뜻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대상이다. 그러므로 공맹의 가르침이 조선시대에 미친 영향을 묻는다는 것은 ‘치국평천하’라는 공맹의 간섭주의적 정치철학이 당시 사회에 미친 영향이 어떠한가 하는 것이 되겠다.<sup>25)</sup> 공맹의 간섭주의적 정치철학을 기본 이념으로 한 조선 왕조는 내정의 실패와 잦은 외침으로 백성은 헐벗고 굶주렸으며 처참하게 살육 당했다. 반대로 왕을 포함한 소수 지배 계층은 공리공론에 의거한 당쟁만을 일삼고, 호의호식하고, 계급적 특혜를 이용하여 백성을 착취했다. 이것이 모두 공맹의 간섭주의적 정치철학이 조선 시대 사람들의 삶에 끼친 해악이다.

그러면 현재는 어떠한가. 동학 혁명 이후로 한반도에서는 일제의 침략과 강점, 해방, 6.25 전쟁, 4.19 학생 의거, 5.16 군사 쿠데타, 5.18 광주 민주화 운동, 6.29 항쟁 등과 같은 엄청난 변화가 이어져 왔다. 동학 혁명

---

비록 좌파적 관점에 기초하고 있어서 해석에 주의를 요하지만, 공제욱 역음, 『국가와 일상: 박정희 시대』 한울, 2008은 국가가 그 당시 개인의 삶에 얼마나 깊이 개입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공맹 사상도 스테티즘의 한 분파로 분류할 수 있다.

25) 초기의 공자 사상은 오늘날의 리버테리언리즘과 유사했다고 한다. 그러나 조선 왕조에 도입되었던 공맹의 정치철학은 큰 정부를 지향하는 사상이다.

으로 반상이 타파되면서 유교적 질서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격변의 와중에서도 지배적인 이념으로서의 공맹의 철학은 비록 중요성이 작아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한반도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심지어 최근에는 ‘유교적 자본주의’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이니 아직도 한국 사회는 정치철학적 관점에서 조선 왕조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고 하면 지나친 주장일까.<sup>26)</sup> 좀 더 자세히 보면, 현재 한국 사회에서 개인의 가치관으로서의 공맹의 가르침은 불행히도 과거에 비하면 중요성이 크게 줄어들었을 뿐 아니라 왜곡되어 사용되는 경우도 자주 볼 수 있다. 그러나 조선왕조는 공맹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하여 통치되었고 공맹의 간섭주의적 정치철학은 아직도 한국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상당수 지식인이 공맹 사상을 설파하고 공맹 사상을 해설하거나 찬양하는 서적의 출판이 이어지고 있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연공서열제는 유교의 장유유서에 기초한 것으로 여겨진다. 물론 정보와 통신의 발달로 세계가 점차 통합되고 있을 뿐 아니라 한국 경제가 과거보다 해외에 더 많이 의존함으로써 공맹의 정치철학과 같은 폐쇄적이고 간섭적인 질서와 이념을 고수하는 일은 과거보다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요약하면, 공맹의 가르침은 개인의 윤리와 규범으로서는 매우 값진 것이 많지만 정치체제의 근간으로서의 간섭주의나 사회주의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 그리고 그런 공맹의 정치철학은 아직도 우리 사회에 작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단기적으로는, 작금의 우리 사회는 제3공화국과 제5공화국의 정치체제에 직·간접의 영향을 받고 있다. 결국 제3·5공화국의 정치체제를 규정하

---

26) 정치철학적 관점에서 유교는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체계이다. 물론 ‘수신제가라는 개인을 위한 도덕과 처세훈이 자본주의와 결합하는 것은 가장 이상적인 것일 것이다. 그 점에서 향간에 일부 학자나 연구자가 사용하고 있는 유교적 자본주의라는 말은 어느 쪽을 말하고 있는지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 일부 연구자는 정치철학적 관점에서 유교와 자본주의를 함께 논의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데 그것은 명백한 오류이다.



는 일이 작금의 우리 사회의 반자본주의 의 원인을 규명하는 일에 한 걸음 다가가는 일이다. 먼저 제3공화국은 스테티즘이 지배한 시대이다. 스테티즘이란 국가가 최우선으로 중시되고 개인은 그런 국가 건설을 위한 수단으로 간주하는 정치철학이다. 그리고 스테티즘은 리버테리언리즘의 대척점에 있는 정치철학이다. 물론 스테티즘으로 제3공화국 시대를 전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 스테티즘 시대라 하더라도 모든 개인의 자유의지와 재산이 부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3공화국의 집권 엘리트들은 국가 건설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그 일에 방해가 되는 개인이나 집단이 있다면 과감히 처벌했다는 점에서 제3공화국 시대를 스테티즘이 지배한 시대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여겨진다. 경제적으로는 해외, 특히 미국에서 유입된 케인즈 경제학이 제3공화국 스테티즘의 이론적 토대가 되었다. 주지하듯이 케인즈 경제학은 개인의 경제 행위에 대한 국가의 간섭을 광범위하게 허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런 케인즈 경제학을 신봉하는 지식인들이 제3공화국의 경제 정책에 깊숙이 관여했던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다. 현대 경제학을 도입하는 초기였던 제3공화국 시절에 자유시장을 강조하는 미제스와 하이에크 등의 저작이 소개되고 교육되었더라면 그 시대나 그 이후 우리사회의 지적, 사상적 환경이 상당히 달라졌을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제5공화국은 일부 사회·경제 정책을 제외한다면 모든 면에서 제3공화국의 연장선상에 있는 만큼 당시의 지배적인 이념은 여전히 스테티즘이다.<sup>27)</sup> 경제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일부 부문에서 제거한 것은 리버테리언리즘과 일치하는 정책을 실시한 것이고 삼청교육대와 같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은 제3공화국 때보다 스테티즘이 더 심화된 예라고 하겠다. 제3·5공화국 시대의 스테티즘이 그 이후의 사회에 미

27) 여기에서 소위 '5·18 민주화 운동'의 성격을 규정하는 일이 필요하다. 5·18은 민주화 운동이라기보다는 개인들이 제3공화국의 스테티즘에 항거한 '자유화 운동'으로 규정해야 한다. 제5공화국은 그런 자유화 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하고 제3공화국의 스테티즘을 연장한 시대였다.

친 영향은 부분적이지만 여전히 유효하다고 하겠다. 주민등록제도의 유지, 국가정보원의 도청을 통한 국민 감시의 일상화, 예비군과 같은 각종 동원 체제, 권위주의적인 사법부, 계획을 통해 국가를 건설할 수 있다는 생각의 지배 등이 스테티즘의 영향을 받은 예라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앞에서 지적한 지식인들의 반자본주의 심리는 당대의 삶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지식인들의 반자본주의는 서적, 방송, 영화, 학교수업 등을 통해 명시적으로 또는 묵시적으로 다음 세대에 전파된다. 정확히 말하면, 반자본주의 심리를 가진 지식인들이 다음 세대를 반자본주의적 지식으로 적극적으로 설득한다. 현재 매일매일 쏟아지는 서적, 방송, 영화 등을 검토하면 그것들의 거의 대부분이 반자본주의 이념을 선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p>28)</sup> 이렇게 해서 젊은 세대가 부지불식간에 반자본주의를 갖게 되고 있다. 그 점에서 다음 세대의 반자본주의는 부분적으로는 현 세대 반자본주의 심리의 결과이다. 이 점은 현 세대의 반자본주의 심리가 현 세대의 운명을 결정하지만 다음 세대의 운명도 또한 일정 부분 결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sup>29)</sup>

---

28) 방송, 특히 공중파 방송이 얼마나 반자본주의적인가 하는 점을 자세히 분석한 책으로는 안재욱, 김영용, 전용덕, 정기화 공저, 『방송과 시장경제』, 경희대학교 시장경제센터, 2006을 참조.

29) 유동운 교수는 논평문에서 호프슈테더(Hoftstede)의 『세계의 문화와 조직』에서 나온 내용을 인용하여 우리나라가 불평등, 집단주의, 위험회피, 단기지향의 문화를 가진 나라라고 지적한다. 그리고 불평등과 집단주의는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어서 유동운 교수는 사회 문화가 단기에 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반자본주의의 원천이 되는 집단주의, 불평등 문화 등이 우리나라 자본주의 정착에 오랫동안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을 염려하고 있다. 유동운 교수의 지적에 상당 부분 공감한다.

### III. 우리 사회의 반자본주의: 그 결과

반자본주의라는 개념을 요약해서 정리하면, 반자본주의란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이념으로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조합주의, 복지국가주의, 보호무역, 스테티즘 등을 옹호하거나 찬성하는 이념이나 태도이다. 반자본주의 제도들이 경제에 미칠 영향은 조금씩 다르지만 모든 반자본주의 제도들에 공통적인 사항이 하나 있다. 그것은 정부가 비대화되고 시장이 위축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정부의 비대화와 시장의 위축을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그리고 반자본주의 제도들이 '장기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다. 왜냐하면 장기에 반자본주의가 사회에 미칠 영향은 '심대할' 것이지만, 단기에서는, 다른 요인이 일정하다면, 반자본주의의 변화가 초래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반자본주의는 개인의 책임보다는 정부의 책임 또는 집단의 책임을 강조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정부의 '비대화'를 초래한다. 정부의 비대화는 그만큼 개인의 생명, 재산, 자유를 탈취할 것이고, 그 결과 개인의 삶은 점점 더 불안해질 것이다. 정부의 비대화는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sup>30)</sup> 정부의 비대화는 먼저 개인의 조세 부담의 증가로 나타난다. 실제로 명목 담세율은 1960년 약 10%에서 2008년 현재 약 22.2%로 증가할 것이 예상된다. 그러나 여기에는 준조세, 강제성 보험과 연금 등이 포함되지 않았다. 각종 준조세를 포함한 국민부담률은 2008년에 28.4%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여기에도 신설 학교용지 부담(금), 강제징병 등과 같은 현물로 납부하는 조세와 적십자회비와 같은 각종 조세성 부담금 또는 수

30) 정부가 시장에 간섭하는 경우에 미칠 결과에 대한 체계적이고 자세한 분석은 라스바드, 머레이, 『인간, 경제, 국가』, 전용덕, 김이석 공역, 나남출판, 2006, 제12장과 동일 저자의 *Power and Market: Government and the Economy*, Ludwig von Mises Institute, 1970를 참조.

수료와 재정적자 등이 포함되어야 하지만 그 규모를 정확히 알 수는 없다. 그러므로 현재 개인의 실질적인 담세율은 그 크기를 정확히 알 수는 없다. 다만 실질 담세율은 35%-45% 수준으로 추정되고 명목 담세율보다 훨씬 크다는 것은 너무 명백하다. 주지하듯이, 정부가 민간으로부터 많은 조세를 징수하면 할수록 그 만큼 개인의 생명, 재산, 자유는 '직접적으로' 위축된다.

정부의 비대화는 경제성장의 둔화 또는 경제 파탄을 초래한다. 정부는 소비가 주요 목적인 기구이다. 그러므로 정부의 비대화는 그 만큼 소비 행위가 증가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 결과 투자 감소를 통해 생산은 감소하며, 경제성장은 둔화되거나 최후의 경우에는 경제 파탄을 초래한다. 공산주의를 채택한 소련, 동구, 중공, 북한 등이 붕괴했거나 붕괴 직전에 있는 것은 공산주의가 큰 정부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경제성장의 둔화 또는 경제 파탄은 공산주의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자본주의에서도 정부가 비대화되면 그 만큼 실질적 의미에서 경제 체제는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가 되고 큰 정부로 운영되는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는 경제성장의 둔화 또는 경제 파탄을 일으킨다. 다시 말하면, 정부의 비대화는 경제성장의 둔화 또는 경제 파탄을 통해 개인의 생명, 재산, 자유를 위협한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제3공화국에서 최근까지 정부의 크기는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정부의 크기와 반비례하여 경제성장은 지속적으로 지지부진해져왔다. 엄밀히는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해왔다. 민간의 경제 행위에 대한 정부의 간섭이 가장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화폐제도과 금융제도에 대한 정부의 통제와 간섭이다. 정부는 지폐를 독점 발행할 권리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민간 금융기관에게 부분지급준비제도를 허용함으로써 화폐공급의 증가를 초래하고 그런 증가가 경기변동을 유발한다.<sup>31)</sup> 1997년의 경제위기 또는 경제파탄은 정부가 화폐제도와 금융제

31)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김학수·전용덕(2009) 참조.

도를 통제한 결과로 발생한 것이다. 그리고 그런 통제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그러므로 미래 언젠가 우리 사회는 다시금 경제위기를 겪을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정부의 비대화는 민간의 경제 행위에 대한 간섭의 증대로 나타난다. 이때 간섭이란 각종 경제 규제를 일컫는다. 예를 들어, 국회가 시장가격보다 높은 추곡수매가를 결정하거나, 교육 보조금을 주거나, 수입을 억제하기 위하여 관세나 비관세 장벽을 쌓는 경우 등을 말한다. 정부의 민간 경제 행위에 대한 간섭은 자원배분의 왜곡과 비효율을 초래한다. 물론 그런 왜곡과 비효율은 경제성장의 둔화를, 그런 왜곡과 비효율이 누적되면 경제 파탄이 초래된다. 1997년의 위기는 여러 가지 원인에서 발생했지만 직접적으로는 외환시장에 대한 간섭과 통제로 촉발되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각종 경제 규제는 다른 부작용도 초래한다. 국가 의료보험과 의료수가 통제가 어떻게 사회의 도덕을 파괴하고 무질서를 초래하는가를 보기로 한다. 의료보험이 국영화되고 의료수가가 규제되면서 상당수 병원은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일부 의료기관은 진료를 하지 않고 의료보험을 청구한다. 왜냐하면 의료보험 당국이 병원의 행위를 감시·감독하는 데는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의료수가의 규제는 과잉진료를 부추긴다. 의료 소비는 다른 재화를 소비할 때와 비교해서 의료 소비자와 의료 공급자 간에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물론 민영 의료보험과 시장에서 결정되는 의료수가 체제하에서도 과잉진료는 발생하지만 그 정도는 국가 의료보험과 의료수가의 규제 체제 하에서보다는 낮다. 그러나 의료수가가 규제되지 않으면서 민영 의료보험 하에서는 의료보험의 거짓 청구는 발생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국가 의료보험과 의료수가 규제는 부도덕한 행위를 촉진하는 것처럼 여겨진다. 그리고 이러한 부도덕한 행위는 다른 행위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다. 그 결과 인간의 도덕성

은 타락하고 범죄를 증가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 물론 의료보험을 거둬서 수령하거나 과잉진료 그 자체는 범죄행위이다. 사실 국가 의료보험과 의료수가 규제가 부도덕한 행위와 범죄를 실제로 얼마나 유발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 과거에 비해 대중 매체에 그런 기사가 많이 실리는 것처럼 필자에게 보일 뿐이다. 그러나 국가 의료보험과 의료수가 규제가 부도덕한 행위와 범죄를 유발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처럼 보인다.

국영 의료보험과 의료수가 규제는 병원의 경영을 어렵게 만들고 그런 상황은 의사들의 진료과목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예비 의사들은 수익을 기대할 수 없는 '흉부외과'를 지원하지 않는 반면에 비(非)의료보험이 많은 진료과목인 '성형외과' 같은 곳에 많은 지원을 한다. 다시 말하면, 국영 의료보험과 의료수가 규제가 전 진료 과목에서 의사들이 균형 있게 배분되는 것을 억제하여, 일부 진료에서는 의사가 남아돌고 일부 진료에서는 의사가 턱없이 부족한 사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왜곡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정부의 비대화는 경제에서 민간 영역을 축소하게 만든다. 예를 들어 정부가 빈곤 계층에게 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주택공사 등을 설립하여 운영한다면 주택시장에서 그만큼 민간의 몫은 줄어든다. 시장에서 민간 영역의 축소는 그만큼 경제 생산성을 떨어뜨리게 된다. 왜냐하면 정부가 설립·운영하는 각종 공기업은 비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런 비효율은 다시 정부를 비대하게 만들게 된다. 비효율을 해결하기 위하여 또 다른 정부 간섭을 시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정부의 비대화가 민간 영역의 축소를, 민간 영역의 축소가 다시 정부의 비대화를 초래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정부의 비대화는 정부가 결정하는 이권의 증가로 나타나고, 그런 이권의 증가는 뇌물의 수수와 공무원의 부정부패로 이어진다. 물론 뇌물의 수수와 공무원의 부정부패가 모든 큰 정부에서 반드시 일어난다고 말할 수

는 없다. 그러나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뇌물의 수수와 공무원의 부정부패는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여 경제의 생산성을 떨어뜨린다. 그리고 뇌물의 수수와 공무원의 부정부패는 그 자체가 도덕의 타락이다. 이러한 타락은 타 분야에서 인간의 도덕성을 감소하게 만든다. 그리고 도덕의 타락은 인간의 정신을 황폐하게 만들어 자살 등으로 이어진다.

정부의 비대화는 소득의 하향평준화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빈부 간 소득격차를 더 크게 만든다.<sup>32)</sup> 왕조 시대에 왕들은 으리으리한 왕궁을 지었다. 그러나 오늘날 자본주의 하에서 대자본가나 대기업가는 그런 정도로 화려하고 비싼 건물을 지을 수 없다. 이러한 사실은 정부가 커지면 빈부 격차가 확대된다는 좋은 사례이다. 정부의 비대화로 인한 경쟁 억제와 계층 이동을 억제한다. 정부의 비대화는 정부가 많은 자원을 특별 집단이나 그룹에게 혜택을 주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데 그 경우에 상위 계층이나 집단이 하위 집단이나 계층보다 많은 혜택을 보기 때문에 빈부 간 소득격차가 발생한다. 정부의 비대화는 활발한 경제성장을 억제하여 소득의 하향 평준화를 초래한다. 소득의 하향평준화와 빈부 간 소득격차는 정치 체제를 불안정하게 만든다. 만약 그런 상황이 극단적으로 악화되면 정치·경제 체제가 붕괴하기에 이른다. 그리고 소득의 하향평준화는 환경오염의 해결을 어렵게 한다. 소득의 하향평준화는 재화에 대한 수요를 감소하게 만들고, 그런 수요 감소는 기업으로 하여금 재화의 제조 시에 발생하는 오염 물질을 제거하는 비용 마련을 어렵게 만들며, 그 결과는 소득이 증가하였을 때와 비교하여 자연환경을 더 파괴하게 만든다. 한 마디로, 정부의 비대화는 인간이 살아가는 자연환경 오염의 개선을 더 어렵게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는 공산체제 하의 소련과 동유럽이 붕괴했을 때 잘 드러났다. 공산 체제 하의 소련과 동유럽의 자연환경 오염 정도가 시장경제를 채택한 나라에서의 자연환경 오염 정도보다 더 심했기 때문이다.

32) 소득의 하향평준화는 아래에서 다룰 평등주의의 결과로도 나타난다.

정부의 비대화는 경제 계산(economic calculation)을 할 수 없는 부문이 증가함을 의미한다.<sup>33)</sup> 왜냐하면 정부가 어떤 자원을 소유하면 그 자원의 가격은 사라지게 되고, 정부의 비대화는 그런 영역이 증대됨을 나타내기 때문이다.<sup>34)</sup> 가격을 알 수 없으면 계산을 할 수 없고 그에 따라 계획을 할 수 없다. 인간은 미래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한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주어진 환경 하에서 부단히 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그런데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가격이 필수적이다. 만약 미래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계획 또는 방법이 있다고 하자. 그런 경우에 행위자는 그 두 가지 계획 중에서 비용이 적게 드는 것을 선택할 것이다. 그럴 경우에 계획에 소요되는 각종 자원의 가격들을 알 수 있을 때만 그 두 계획의 비용 비교가 가능하다. 그러나 정부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자원은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기 때문에 그 가격을 알 수 없다. 만약 정부가 비대화되면 그만큼 정부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자원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것은 더 많은 영역에서 시장 가격이 없어진다는 것을 뜻한다. 결국 정부의 비대화는 행위자들이 계획을 세우는 것을 점점 더 어렵게 만든다. 계획의 어려움은 자원 배분의 비효율, 경제적 불합리성, 혼란, 계획의 어려움으로 인한 불안 등을 초래한다. 이것이 사회주의가 붕괴한 궁극적 이유인데 이런 과정은 정부의 비대화 과정에도 적용된다는 것이다. 다만 두 경우에 그 정도가 다를 뿐이다.

정부의 비대화는 여러 집단이나 계층 간에 갈등을 증폭시킨다. 정부는 본질적으로 차별적이기 때문에 정부의 통치 하에 있는 구성원 간에 갈등

33) 자세한 내용은 Rothbard, Murray N., "The End of Socialism and the Calculation Debate Revisited", *The Review of Austrian Economics*, vol. 5, No. 2, 1991, pp.51-76와 라스바드, 머레이, 『인간, 경제, 국가』, 전용덕, 김이석 공역, 나남출판, 2006의 제9장 참조.

34) 라스바드는 앞의 논문에서 자산의 사적 소유가 정부에 의해 억제됨으로써 경제계산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미세스의 주장을 재확인했다. 라스바드는 또한 하이에크가 주장하는 지식의 문제는 부차적인 것임을 지적했다. 하이에크가 경제계산 논쟁에서 사회주의자들에게 패배한 것은 바로 그 이유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은 내재된 것이다. 정부의 비대화는 그런 갈등을 증폭시키기 마련이다. 물론 정부는 그 점을 염두에 두고 각종 설득을 하고 자신의 행위의 타당성을 선전한다. 그러나 정부의 비대화는 그런 설득과 선전을 점점 무의미하게 만든다. 오늘날 갈등은 대부분 경제적인 것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몇 년 전 정부가 놓어준 부채 경감 대책을 내놓았을 때 도시 서민의 불만이 터져 나왔다. 비록 그러한 불만이 어떤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지는 않았다. 그러나 갈등이 잠재되어 있는 것은 확실하다. 그리고 기회가 있으면 표면화될 것이다. 세금 문제만 나오면 봉급생활자는 언제나 자신의 소득은 모두 세무당국에 노출되지만 자영업자의 소득은 제대로 신고 되지 않는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한국 사회에서 봉급생활자와 자영업자간의 갈등 관계는 역사가 오랜 것이다. 의료보험의 산정에 있어서도 소득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두 집단 간의 관계가 온전치 못한 것이 사실이다. 징병제에 있어서도 각종 특혜 제도를 만들어 줌으로써 그러한 특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집단과 그렇지 못한 집단 간의 갈등이 존재한다. 지역 간 갈등 또는 '지역주의'도 정부의 비대화와 깊은 연관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앞에서 든 사례들 이외에도 많은 갈등이 정부가 시행하는 경제 정책 때문에 발생한다.

위의 예를 일반화하면 다음과 같다. 정부가 시행하는 정책이나 국회에서 만들어지는 법은 거의 대부분 이익집단의 이익을 돌보기 위하여 시행되거나 만들어진다. 그러한 정책이나 법은 필연적으로 승자와 패자를 만들어내게 된다. 당연히 그 두 집단은 즉각적으로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잠재적으로 갈등을 일으킬 소지를 안고 있다가 기회가 오면 패자의 불만이 표면화된다. 그리고 계층이나 집단 간의 갈등은 정치·경제 체제를 불안하게 만들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정치·경제 체제가 붕괴하거나 각 개인이 이민을 떠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한국 사회가 위태롭거나 깨어지기 쉬운 상태에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은 정부의 비대화로 인한 '갈

등'의 증폭이 그 중요한 이유일 것이다.<sup>35)</sup>

우리 사회의 병폐의 하나로 가족주의에 기초한 의리와 정리의 문화를 꼽을 수 있다. 의리와 정리의 문화가 극적으로 나타난 현상이 '연고주의'이다.<sup>36)</sup> 상당수 대학에서 교수 충원이 연고주의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의과대학 부속 병원 의사는 모교 출신이 특히 많다고 한다). 모교 출신은 그의 경쟁력과 상관없이 다른 경쟁자보다 우선적으로 채용되고 있다. 일부 대학에서는 모교 출신이 아닌 교수들을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연고주의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대학에서 연고주의가 존속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연고주의에 의해 교수를 뽑는 행위는 긴 시간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고 그 원인도 중첩되어 있다고 하겠다. 연고주의는 국립 종합대학, 우수한 사립 종합대학 등에서 현저하다. 두 경우 모두 실제적인 대학의 소유주가 없는 것이다. 현재 많은 사립 대학이 소유주의 역할이 유명무실하지만 일류라고 일컬어지는 사립 종합 대학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경우에 교수의 임용은 모집 학과 단위의 교수들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 그 중에서도 학과를 이끌어 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몇몇 원로 교수들이 모교출신 교수직 지원자를 선호하는 경우가 흔하다. 이러한 경우는 무엇보다 학과의 운용에 있어서 원로 교수들이 주도권을 쥐기 위한 것이다. 대학도 다른 조직과 크게 다르지 않아서 정치적 행위 즉, 소득재분배 행위가 존재하기 때문에 교수간의 담합이나 주도권으로 자신의 몫을 더 크게 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 연고주의는 유용한 역할을 한다. 연고주의에 의해 교수간의 관계가 대등해지지 못하고 상하 관계 내지는 선후배 관계와 같은 수직 관계가 된다. 실제로

---

35) 정부의 비대화는 '체면주의와 형식주의', '유행주의', '속성주의'(빨리빨리주의) 등도 초래한다. 정부의 비대화가 초래하는 각종 '주의'에 대해서는 전용덕, "백태열의 '문화비판'을 읽고", 『emerge 새천년』, 2001, 5월호, pp.195-203를 참조.

36) 이 부분은 전용덕, "백태열의 '문화비판'을 읽고", 『emerge 새천년』, 2001, 5월호, pp. 195-203에서 발췌하여 수정한 것임.

연고주의가 만연하는 대학이나 학과의 교수간의 관계는 군대의 상하관계와 다를 바가 없다고 한다. 교수들이 연고주의를 통해 학교 전체의 이익이 아니라 자신들의 좁은 이익을 돌볼 수 있는 것은 궁극적으로 교육부가 시장 간섭을 통해 경쟁을 억제하기 때문이다. 현재 교육시장은 정부의 간섭이 극심한 곳이다. 교육시장은 사회주의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대학이 아주 간단한 학점 수여 방식 하나도 정할 수 없다. 예를 들면 최근까지 외국어를 '점수를 주는 방식'에서 '합격'(pass)과 '불합격'(nonpass)으로 구분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데도 교육부의 허가를 받았다고 한다. 현재 대학 교수의 임금체계는 기본이 연공서열제로 사회주의와 다를 바가 없다. 교육부가 경쟁을 억제하거나 제거함으로써 연고주의와 같은 의리와 정실 방식이 존속되고 있는 것이다. 경쟁 억제는 또한 필연적으로 부정부패를 만연시킨다. 여기에는 물론 대학의 소유권이 명백하지 않은 점 등도 가세하고 있다. 지구상에서 가장 자본주의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미국 교육시장과 한국 교육시장을 대비해보면 더욱 뚜렷이 연고주의가 교육부에 의한 경쟁의 억제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경쟁이 치열한 국제간 상거래에서 연고주의가 횡행하는 것을 본적이 있는가. 국제거래가 많은 대기업일수록 연고주의나 의리와 정리에 의한 문화는 찾아 볼 수 없다. 그런 문화가 전혀 없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말이다. 만약 연고주의 또는 의리와 정리에 의한 문화가 있다면 해당 기업 내 정부 관련 업무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공기업의 인사는 아직도 정부에 의해 행해지고 대부분 연고주의에 의해 결정된다. 정치의 장이 어느 곳보다 연고주의가 횡행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데 그것은 정치의 장 자체가 독점이거나 제도적으로 경쟁을 차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경쟁을 차단한 곳에 연고주의, 더 넓게는 의리와 정리의 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 시장에서 경쟁을 차단하거나 억제할 수 있는 조직이나 단체는 인·허가권을 가진 정부 이외에는 없다. 정부의 인·허가권을 없애버리거나 줄이는

방법이 연고주의, 더 나아가 의리와 정리의 문화에 대한 해결책이라고 하겠다. 그런 연후에도 연고주의가 존재한다면 그것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한 것 또는 인지상정의 결과로 큰 문제가 없다고 하겠다.

정부의 비대화는 민간영역의 축소와 생산성의 하락과 각종 폐해를 초래하여 경제는 성장하지 않거나 후퇴한다. 1988년 이후 정부는 과거 어느 때보다 빠르게 비대화되어 왔고 그 기간에 경제성장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1997년에는 경제위기를 맞았다. 경제성장이 부진하거나 마이너스가 되면 인구는 감소한다. 최근에 인구는 미미하게 증가하거나 거의 증가를 멈춘 상태이다. 그런 인구의 감소는 다시 수요의 감소를 통해 생산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는 영역을 줄이게 된다. 그것은 경제성장에 점증적인 방식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악순환이 누적되면 국가가 몰락하게 된다.

지금까지 반자본주의로 인한 정부의 비대화가 초래할 결과를 예측해 보았다. 지금부터는 다수의 일반인과 지식인이 '평등주의'를 지향한 결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평등주의는 반자본주의 심리가 낳은 결과이다. 왜냐하면 자본주의는 개인주의를 기초로 하고 있고 모든 개인은 모두 다르다는 점에서 평등주의는 차별적이기 때문이다. 평등주의는 개인 간의 차이를 무시한다는 점에서 반자본주의적이다. 다수의 실패한 개인은 차별적 결과보다는 평등한 결과를 소망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다. 그런 사회에서는 원망, 증오 등의 감정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평등주의는 일반인과 지식인의 반자본주의 심리에 기초를 두고 있다. 그러면 평등주의는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우리나라에서 평등주의가 가장 잘 구현된 곳이 교육계이다.<sup>37)</sup> 고교평준화 정책이 시행된 지가 오래되었다. 고교평준화 정책은 학생들의 학력을

---

37) 이하에서 제시한 사례는 우리 사회 평등주의가 구현된 경우의 극히 일부분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저하케 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고 긴 시간이 지난 후에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대학 입시에서 학교 간 실력의 차이를 부정함으로써 학생들이 불필요하게 학교를 옮겨 다니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사립대학을 포함한 사립학교에서마저도 연공서열제가 오랫동안 시행됨으로써 학교의 경쟁력은 떨어져 왔다. 국·공립 학교에서는 연공서열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교원평가제를 실시하고자 하지만 교원들의 반발이 작지 않다. 그 결과 교육산업은 서서히 붕괴하고 있고 조기유학 길에 오르는 학생의 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공교육의 평등주의가 사교육의 비대화를 불러 온 한 가지 원인일 것이다. 그런 조기유학은 학부모의 이혼 또는 학부모를 자살케 함으로써 가족을 붕괴시키고 있다.<sup>38)</sup> 물론 조기 유학생 자녀를 둔 극히 일부 가정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기는 하지만 말이다. 교육계에서의 평등주의가 극한에 이르렀다고 하겠다. 그러나 다수의 일반인과 지식인이 마음속에 가진 교육계에서의 평등주의는 쉽게 바뀔 것 같지 않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평등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가장 구체적인 목표로 소득의 평등을 제시한다. 만약 소득의 평등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실현하고자 한다면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자본주의에서 자신의 자산을 자신의 의지대로 처분할 자유가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소득의 평등을 국가의 강제력을 이용하여 이루고자 할 때 발생한다. 소득의 평등을 국가 차원에서 이룩하고자 하는 이념이 바로 '복지국가주의'이다. 다시 말하면, 복지국가주의는 국가 차원에서 국가의 강제력을 이용하여 평등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이념이다. 그러므로 복지국가주의는 반자본주의적인 이념이고 그 뿌리는 평등주의라는 이념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많은 지식인과 정부가 복지국가주의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일찍이 복지국가주의를

38) 이것이 소위 우리 사회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는 '기러기 아빠'의 자살, 이혼 등을 지칭한다.

채택한 스웨덴 등이 경제 혼란으로 복지국가주의를 포기하고 있음을 알 필요가 있다.

평등주의가 가장 적나라하게 구현된 제도가 상속세제이다. 소득이 높을 수록 높은 상속세를 징수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태어날 때부터 가능한 유사한 출발 조건, 특히 물질적으로 유사한 출발 조건을 갖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 사회를 만들겠다는 생각이야말로 반자본주의 심리에서 연유한다고 하겠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천차만별이다. 만약 인간의 물질적 출발 조건을 유사하게 만들기를 원한다면 신이 인간에게 준 천부적인 재능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재능도 동일하게 만들어야 공평하고 평등한 사회를 이룩하는 것이 아닌가. 앞에서 지적한 것은 평등주의와 관련한 상속세의 문제점이다. 그 이외에도 상속세의 문제점은 많지만 여기에서는 생략한다. 다만 상속세를 회피하고자 하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찬성할 수는 없지만 사갈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상속세를 폐지하는 것이 인간의 동기와 부합하다는 점에서 상속세를 폐지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반자본주의는 기업의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사외이사의 의무화, 기업의 사회적 책무 강조 등은 기업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반자본주의 심리가 반영된 제도나 철학이다. 먼저 사외이사는 해당 기업의 경영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거수기' 역할을 하기가 십상이다. 그 경우에 사외이사라는 제도는 기업에 비용만을 부담시킨다. 또는 사외이사는 위험을 회피하는 결정을 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 위험이 매우 큰 신규 투자나 업종에 투자하는 일은 어렵게 된다. 기업이 위기에 처하거나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특별한 경우에 사외이사는 걸림돌로 작용할 여지가 있을 수 있다. 더 근본적으로, 기업의 이익과 관련이 없는 사외이사가 기업의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것은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다. 기업의 소유자는 대주주이고 바로 그 이유로 대주주 또는 대주주의 대표자만이 기업의 이익과

손해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사외이사 제도가 도입된 역사가 길지 않은 만큼 현실적인 영향을 가능하기는 현재로서는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사외이사 제도의 도입으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거나 기업이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할 여지가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최근에 정부는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지원하는 기업이야말로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기업이고 그런 기업이 세상을 따뜻하게 만든다고 하는 내용의 TV 광고를 한 적이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두 가지 주장이 있다. 첫째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란 이윤을 남겨서 그것으로 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부과된 세금 등을 성실히 납부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란 이윤의 창출이라는 기업 본연의 임무에 충실 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둘째는 기업이 기업 외적인 일, 예를 들어 가난한 사람을 위하여 장학 사업을 하거나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이야말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것이다. 두 번째 주장은 반자본주의적 심리를 가진 지식인들이 만들어낸 잘못된 주장이다. 만약 두 번째 주장에 따라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수행한다면 그 기업은 활력을 잃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사회공헌 활동의 대부분은 소비행위이기 때문이다. 자본주의의 엔진이라 할 수 있는 기업들이 활력을 잃는다면 그 나라 경제도 활력을 잃게 될 것이다.

최근에는 기업의 이윤추구 활동을 직접적으로 비난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기업이 벌어들인 과도한 이윤을 문제 삼으면서 '원가공개'를 요구하는 것이 그것이다. 원가공개는 필연적으로 해당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가격 규제를 불러올 것이다. 또 과도한 이윤은 사회공헌 활동에 사용할 것을 요구한다. 가격 규제는 해당 재화나 서비스의 부족을 초래할 것이고 소비자가 실제로 지불하는 가격이나 비용은 상승할 것이다. 과도한 이윤에 대한 사회공헌 요구는 앞에서 서술한 결과를 초래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이제부터 반자본주의적 조직이면서 영향력이 절대적인 노동조합이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기로 한다. 노동조합이 우리 사회에서 위세를 떨치고 파괴적인 것은 한국 사회의 팽배한 반자본주의 심리에 기초한 것이다. 반자본주의 심리가 상대적으로 약한 국가에서도 노동조합은 존재하지만 현실적으로 그 위세와 파괴성은 미약하다. 반자본주의 심리와 노동조합의 위세와 파괴성 간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대중의 반자본주의 심리가 정치 지도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고, 정부의 그런 친노동조합적인 정책이 노동조합의 불법 행위에 대한 공권력의 부실한 법집행을 초래하며, 그 결과 노동조합은 여론의 지지를 업고 우리 사회에서 위세를 떨치고 파괴적이 되어왔다. 특히 최근 복수노조의 허용은 노동조합의 파괴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길을 허용한 것이다.<sup>39)</sup> 물론 복수노조가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그렇다.

그러면 노동조합이 경제와 사회에 미칠 영향을 검토해 본다.<sup>40)</sup> 주지하듯이, 노동조합은 단체협상을 통해 시장에서 결정되는 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받으므로써 소득 재분배를 초래하는 ‘비자발적인’ 조직이다. 시장에서 결정되는 임금보다 높은 임금은 영구적인 실업자 또는 반영구적 실업자의 양산, 노동자의 비정규직화를 초래하고 있다. 비공식적인 집계에 따르면, 현재 영구 실업자 또는 반영구 실업자는 약 2백만 명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영구 실업자, 반영구 실업자, 비정규직 노동자 등의 일부는 자연스럽게 사회 불만 세력이 된다. 그 결과 이들은 사회를 무질서하게 만들 소지를 다분히 가지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리고 이들 중 일부는 궁극적으로 자살을 함으로써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을 붕괴시킨다.

39) 복수노조를 법적으로 허용했지만 그 법의 시행은 이 글을 쓰는 시점까지 유보된 상태이다.

40) 노동조합이 경제와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전용덕, “10. 노동조합과 정치자금의 기부”, 김영용, 김정호, 전용덕 공저, 『헌법재판소 판례연구』, 자유기업원, 2003과 동일 저자의 “11. 사용자와 노동자: 권리와 의무”를 참고.



노동조합은 기업과 산업의 평균비용 상승과 생산성 하락을 초래한다. 평균비용 상승과 생산성 하락은 간신히 명맥을 이어가는 한계기업(marginal firm)을 도산하게 만든다.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요구하는 생산 방식보다는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생산 방식을 관철시킴으로써 생산 활동의 왜곡을 초래한다. 앞에서 언급한 노동조합이 초래할 각종 부작용은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생활수준 하락을 초래한다. 한계기업 도산, 소비자의 생활수준 하락 등은 영구 실업자 등이 사회 불만 세력이 되어 사회를 무질서하게 만드는 것을 촉진한다.

앞에서 영구적 실업, 반영구적 실업, 비정규직, 소비자의 생활수준 하락 등은 전적으로 노동조합 때문에 발생한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그러나 노동조합 지도자들은 노동조합이 영구적 실업 등을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을 끊임없이 펼침으로써, 그렇게 하여 비정규직 보호법 등을 제정함으로써 노동조합과 영구적 실업 등과의 인과관계에 대한 일반인의 이해를 방해한다. 그리고 이러한 방해는 영구적인 실업자, 반영구적 실업자, 비정규직 노동자, 한계기업 소유자 등이 자신들의 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길을 없애거나 막아버린다. 특히 일부 교사노조, 공무원노조는 최근에 자본주의적 개혁에 반대하고 어린 학생에게 좌파적 이념을 전파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이러한 행태는 노조가 다음 세대에 반자본주의적 심리를 전파하는 선봉장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반자본주의 심리에 의한 보호무역이 초래할 결과를 보기로 한다. 쌀의 경우를 예로 들어본다.<sup>41)</sup> 먼저 쌀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는 매년 일정한 물량을 쌀 생산국가로부터 의무적으로 수입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쌀이 남아도는 상황에서 쌀 시장 개방을 유예한 대가로 매년 일정 양의 쌀을 수

---

41) 엄밀히 말해서 국내에서 해당 재화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없으면 보호무역의 효과는 제한적이다. 쌀의 경우에 쌀의 수입 제한만으로 농업을 잘 보호할 수 없기 때문에 국내산 쌀의 가격을 규제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보호무역의 효과는 국내 규제와 동시에 고려해야 하지만 그 점은 논외로 한다.

입하고 있는 것이다. 이 쌀은 과자용 원료로 사용되거나 창고에 보관되어 거의 폐기 처분되다시피 하고 있다. 이러한 쌀의 보관에도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이다. 정확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실상을 알 수 없지만 일정 물량의 쌀 수입과 보관에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한 마디로, 보호무역과 추곡수매 제도로 높게 규제되는 쌀 가격은 소득재분배, 농약의 과다 살포와 그에 따른 각종 질병 유발과 환경오염, 과다한 쌀의 생산과 보관, 불필요한 쌀의 폐기 처분, 식생활의 왜곡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요컨대, 반자본주의의 결과를 모두 나열하는 것은 쉽지 않다. 반자본주의는 그만큼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긴 시간에 걸쳐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그 영향도 작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반자본주의는 개인이 소유한 재산을 탈취하여 공유의 영역으로 이전한다. 공유 영역으로 넘어간 재산은 소위 말하는 ‘공유의 비극’(tragedy of common)에 빠진다. 그 비극의 종말은 국가의 붕괴를 통해 개인이 가진 생명, 재산, 자유 등이 사라지는 것이다.

## IV. 우리 사회의 반자본주의: 그 대책

반자본주의를 없애는 방법 또는 길은 무엇인가? 반자본주의의 근원은 개인이기 때문에 개인적 차원에서의 반자본주의의 해결책을 찾는 것이 우선이다. 궁극적으로 자신의 사고방식은 자신이 결정하지만 그런 결정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교육이다. 교육은 가정교육과 같은 비공식적인 교육과 학교교육과 같은 공식적인 교육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가정교육은 철저히 각자에게 그 책임이 있다. 그러나 그런 교육마저도 교육을 위한 각종 수단인 서적, 신문, 방송, 각종 비디오 매체 또는 오디오 매체 등은 자본주의를 연구하고 교육하는 기관이나 조직이 활발하게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학교교육을 위해서는 교사의 양성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느 것 하나 만족스럽지 못하다. 자본주의 교육을 위한 교재의 발간과 배포, 교사의 양성 등을 위한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은 거의 전무하다. 그러니 발간되는 서적, 신문, 방송, 각종 매체에는 반자본주의적 내용이 넘쳐나고 있고 그 때문에 좀처럼 반자본주의 심리와 반자본주의가 사라지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앞에서 지적했듯이 반자본주의 심리는 인간 심리의 내재적인 결합 때문에 생겨나기 때문에 자본주의를 교육하여 반자본주의 심리를 없애는 일은 일회성이 아니라 ‘영속적이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언제라도 반자본주의 심리가 사회를 지배하여, 반자본주의 사회가 될 것이다. 요약하면, 자본주의를 연구하고 교육하는 기관과 조직의 설립과 영속적인 자본주의 교육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sup>42)</sup>

42) 기업들이 반자본주의를 소리 높여 외치는 각종 단체에게 많은 금액의 기부 등을 한다는 사실은 우리나라의 자본주의, 더 나아가서 자본주의로 인한 혜택을 누리는 모든 사람, 기업, 단체 등에게 매우 불행한 일이다.

초·중·고생을 위한 교과서는 현재 국가의 검인정을 받아야 한다. 검인정 때문에 당시 정부가 어떤 이념에 치중하느냐에 따라 교과서의 내용도 달라진다. 정부의 이념적 성향에 따라 교과서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도 보기에 따라 문제일 수 있다. 그러나 검인정 교과서의 본질적 문제점은 국가가 사상의 자유를 억제한다는 것과 국가를 강조하고 개인을 무시하거나 개인을 국가를 위한 부속장치 썸으로 간주하는 이념을 전파하게 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검인정 교과서는 사상의 자유를 억제하고 스테티즘을 온존 또는 확산시키는 장치이다. 스테티즘은 개인의 파멸 뿐 아니라 국가 간 충돌을 필연적으로 불러온다. 교과서의 내용을 정부가 검인정하는 것을 금지할 것을 제안한다.

교과서의 검인정 폐지가 교육에 관한 단기적인 목표라면 공교육의 존속 여부는 장기적인 것이다. 교과서의 검인정 제도에 비한다면 공교육 제도 자체가 스테티즘의 온존 또는 확산에 더 기여한다. 또한 공교육이 사교육보다 스테티즘의 온존 또는 확산에 더 기여한다. 공교육은 개인의 자기 결정권을 부인한다. 정부가 공교육을 위해 비용을 지출해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정부의 비대화를 초래한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공교육을 폐지할 것을 제안한다. 공교육을 폐지하면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교육의 기회가 봉쇄되지 않았는가 하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교육이 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충분히 크다는 점이 인식되면 사교육에서도 그런 사람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자원이 충분히 확보가 되기 때문에 공교육 제도보다 더 효율적으로 그런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교육이 공공재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 또는 민간이 자율적으로 교육을 공급하도록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다.

가정과 학교에서 중요하게 가르쳐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개인에게 있고 집단이나 정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어느 사회, 어느 시대나 개인의 책임 의식은 자본주의, 더 나아가 우

리 모두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것은 재산의 개인적 지배리는 자본주의를 위해 가장 기초가 되는 철학이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사회의 학교교육은 입시를 위주로 하는 지식 전달의 장으로만 기능한다. 가정교육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없지만 교육을 해야 하는 부모 등이 경제활동으로 많은 시간을 소비할 뿐만 아니라 그런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가정교육도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일에 실패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입시 위주의 암기식 교육에서 탈피하여 책임의식, 질서 등을 강조하는 교육으로의 전환이 절실히 요구된다.

자본주의 사회는 경쟁을 통해 성공과 실패를 결정짓는 사회이다. 그러므로 누구나 경쟁의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본주의는 존립 불가능하다. 미제스는 지식인이 자신보다 더 성공한 동료나 친구를 볼 때 느끼는 좌절감과 굴욕감을 감추기 위하여 자본주의 제도를 비난한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성공한 사람은 상대적으로 덜 성공한 사람보다 그 수가 지극히 적다. 다시 말하면, 다수의 지식인은 충분히 성공하지 못하고 그런 지식인은 필연적으로 희생양을 찾는다는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지식인은 희생양을 찾을 것이 아니라 경쟁의 결과에 승복해야 하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예를 들어, 스포츠를 할 때도 패자는 패배를 깨끗이 인정하는 태도를 기르고 심판도 규칙을 공정하게 집행하여 말쑥의 소지를 없애야 한다. 어느 사회나 지식인들을 포함한 엘리트들의 수준이 그 사회의 운명을 결정한다. '총풍'과 같은 사건은 우리 사회의 엘리트들이 과정은 무시하고 결과에만 집착한 것으로 우리 사회 지도층의 도덕 수준을 보여준 사건이다.<sup>43)</sup> 그 점에서 총풍 사건은 우리 사회 엘리트의 수치다. 사회 지도층의 교육과 도덕재무장이 절실하다고

43) 여기에서 총풍이란 김대중 대통령 후보의 맞상대였던 이회창 후보의 아들이 병역에서 불법으로 특혜를 받았다는 거짓 정보를 유포시켜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친 사건을 말한다. 이 사건은 법정에서 그 정보가 거짓이었음이 밝혀졌다. 그러나 재판 이전에 이미 대통령 선거는 김대중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것으로 결말이 났다.

하겠다.<sup>44)</sup>

역사적으로 우리 사회의 간섭주의적 철학의 뿌리는 멀게는 공맹의 유교에, 가깝게는 제3·5공화국의 스테티즘에 있다고 주장했다. 공맹 사상의 한반도 지배는 지난 오백년 이상 지속되었고, 제3·5공화국은 30년간 지속되었다. 그 결과 오늘날에도 여전히 공맹 사상과 스테티즘은 우리 사회 구석 구석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한 영향력을 자세히 분석하고 제거하는 일은 자본주의를 위해 긴급하다. 그러나 공맹 사상과 제3·5공화국의 스테티즘에 대한 분석은 많지 않다. 특히 제3·5공화국의 스테티즘에 대한 비판적 분석은 좌파 이념 진영에서는 어느 정도 활발한 것으로 보이나 정작 우파 이념 진영에서는 거의 전무한 것으로 보인다. 알게 모르게 우리의 삶에 깊숙이 침투해 있는 공맹 사상과 제3·5공화국의 스테티즘을 극복하는 노력을 모든 개인과 집단에게 촉구한다.

정치인은 입만 열었다하면 민족과 국가를 강조한다. 그러나 정치가를 포함한 지식인들은 민족주의를 자극하는 일을 자제해야 한다. 경제 문제에 관한 한 민족주의는 보호무역을 초래하기 쉽고 그것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대중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민족주의는 언제나 개인보다는 국가를 강조하기 때문에 사회의 철학이 리버테리아니즘보다 스테티즘으로 흐르게 만들 수도 있다. 정치인이 민족과 국가를 강조하는 일을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

미국의 소설가 마크 트웨인은 큰 정부가 모든 문제의 근원임을 깨닫고 큰 정부에 이르는 방법으로 정부가 통계를 작성하는 것이라는 점을 다음과 같이 외쳤다. “빌어먹을 통계! 통계! 통계!” 아마도 통계를 작성하면 그에 따른 간섭을 하게 된다는 의미일 것이다. 예를 들어 소득 통계를 작성하면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

44) 여기에서 사회 지도층의 도덕재무장이란 지도층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가져야 한다는 말이 아니다. 오히려 사회가 유지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도덕, 예를 들면 정직, 신의, 성실 등을 지도층이 가져야 한다는 의미이다.

로 정부가 통계를 작성하는 일을 그만 둘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우리나라 달력에는 많은 날이 어떤 사건이나 일을 기념하는 기념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런 기념일에는 필연적으로 정치가들이 기념일 행사를 주관하게 된다, 정치가들이 그런 기념일 주관하는 것은 국민을 정치의 장으로 끌어들이는 것으로 궁극적으로 큰 정부를 초래하는 하나의 연결고리이다. 대부분의 기념일을 폐지할 것을 제안한다.

민주주의는 다수의 지배를 인정하는 방식이다.<sup>45)</sup> 자본주의는 개인의 지배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민주주의는 자본주의와 양립 불가능하다. 그러나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양립할 수도 있다. 민주주의 목표가 언제나 '자유'이고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만장일치를 이룰 수 있다면 두 제도의 양립은 가능하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경우에 만장일치는 실제로 가능하지 않다. 심지어 소수의 사람이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경우라도 만장일치는 쉽지 않다. 왜냐하면 인간은 모두 다르고 각자 다양한 견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sup>46)</sup> 민주주의의 목표가 언제나 자유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인구의 수와 상관없이 크지 않다. 그러면 다른 대안은 없는가?

호페(Hoppe)의 연구에 의하면 실제로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대부분의 나라에서 사회 민주주의(social democracy)가 도입되었다.<sup>47)</sup> 사회민주정부의 수립으로 시간선호도의 상승, 정부의 팽창, 문명퇴행 과정 등이 시동이 걸리기 시작했다. 사회민주주의는 대내적으로는 결혼과 가족 제도가 점점 취약해져 자녀수의 감소, 이혼율, 사생아, 단독부모, 독신, 낙태의 증가 등을 초래했다. 또한 병역 의무의 보편화, 미증유의 인플레이션, 이민통제,

45) 민주주의는 직접 민주주의와 간접 민주주의, 두 가지 민주주의가 있다, 어느 방식을 택하든 아래에서의 주장은 그대로 적용된다.

46) 그러나 소수의 사람이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만장일치가 전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47)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호페, 한스-헤르만, 『민주주의는 실패한 신인가』, 자유기업원, 2001을 참조.

저축율의 하락 등으로 이어졌다. 정치적·지적 엘리트들의 정교한 인식능력과 대중교육의 질이 하락하였고, 범죄율, 구조적 실업, 복지제도 의존, 기생주의, 나태, 무모함, 무례, 정신병, 쾌락주의 등이 증대하였다. 또 조세, 정부 부채, 공적 고용 등의 증대와 금본위제의 파괴, 중앙집권의 가속화, 전쟁의 빈도와 잔혹성이 증대하였다. 사법들도 정부의 입법과 규제에 의해 왜곡되었다. 호폐는 군주정에서보다는 사회민주정에서 앞에서 지적한 모든 것이 더 심각해졌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또는 직관적으로 논증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군주정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는 것도 분명하다. 그리하여 호폐는 자본주의를 위한다면 사회민주주의를 자연적 질서로 바꿀 것을 제안한다. 물론 자연적 질서는 장기적인 목표이다. 단기적으로는 법의 제정 절차를 현행보다 더 까다롭게 하는-예를 든다면, 양원제와 2/3 다수결제 또는 4/5 다수결제 채택-것이 하나의 대안일 수 있다. 필자는 민주주의에 대한 대안을 활발히 연구하고 토론할 것을 제안한다.<sup>48)</sup> 물론 민주주의는 합의에 이르는 방식이기 때문에 반자본주의 심리의 원인이 아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민주주의는 자본주의와 양립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여론에 의한 정부의 비대화와 그에 따른 각종 문제점을 초래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앞에서 제안한 방법들을 실천한다면 반자본주의에 의해 초래되는 많은 문제점들이 사라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헌법은 선언적 의미를 가지는 단순한 문서 이상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을 리버테리아니즘에 맞게 개정하는 일은 개인의 삶, 재산, 자유에 대한 국가의 침해를 억제하기 위해 현재로서는 그 필요성을 부인할 수는 없다.

48) 호자는 자본주의가 그렇게 중요하느냐고 반문할지도 모르겠다. 사람들의 일차적인 관심이 생존의 문제라는 점에 대해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그렇다면 사실상 경제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경제제도를 만들어내는 일이 무엇보다도 우선한다. 자본주의는 다른 어떤 제도보다 경제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다. 비록 자본주의가 경제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할 수는 없지만 말이다. 정치제도는 그런 경제제도를 잘 보존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부차적이라는 것이다.



#### IV. 지적 투쟁을 촉구하며

우리 사회의 반자본주의는 이미 임계점을 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우리 모두가 그런 반자본주의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에 이른 것으로 여겨진다는 것이다. 반자본주의라는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무엇보다 모든 개인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한 미세스(Mises)의 지적을 인용하고자 한다. “모든 사람은 그의 어깨에 사회의 일부를 짊어져야 한다: 누구도 그의 그런 몫을 다른 사람이 대신해 주지 않는다. 그리고 사회가 파멸을 향해 돌진할 때 누구도 그 자신을 위한 안전한 길을 발견할 수 없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그 자신의 이익을 위해 지적 투쟁에 용감하게 뛰어들어야 한다. 누구도 무관심한 상태로 비켜서서 있을 수 없다: 모든 사람의 이익은 그런 투쟁의 결과에 달려 있다. 그의 선택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위대한 역사적 투쟁에 빨려 들어간다. 그 투쟁이란 시대가 우리를 돌입하게 한 결정적 전쟁을 말한다.”<sup>49)</sup>

마지막으로, 이 글은 분석적 논문이라기보다는 직관적 에세이에 가깝다. 그러나 때로는 통찰력 또는 직관이 객관적 자료보다 유용한 경우가 있다. 본 논문의 주제가 바로 그런 경우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점이 본 논문의 한계임도 분명해 보인다. 이 글을 토대로 반자본주의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고 그 결과 좀 더 정밀하고 분석적인 내용의 논문이 나오기를 기대해 본다.

---

49) Herbener, Jeffery M., “Ludwig von Mises and the Austrian Economics”, *The Review of Austrian Economics*, vol. 5, No. 2(1991), P.33에서 재인용. 원전은 Mises, Ludwig von, *A Call to Activism*(1988), P.169.

## 참고문헌

- 공병호, 『시장경제와 그 적들』, 자유기업센터, 1997
- 공제욱 엮음, 『국가와 일상: 박정희 시대』, 한울, 2008
- 김영용, 김정호, 전용덕 공저, 『헌법재판소 판례연구』, 자유기업원, 2003
- 김영용, 안재욱, 전용덕 공저, 『지식인과 한국경제』, 자유기업원, 1999
- 김학수, 전용덕 공저, “국제금융위기의 원인: 정부정책의 실패”, 미발표 원고, 한국경제연구원, 2009
- 민경국, 『자유주의의 지혜』, 아카넷, 2007
- 미체스, 루드비히 폰, 『자본주의 정신과 반자본주의 심리』, 김진현 역, 한국경제연구원, 1984
- 안재욱, 김영용, 전용덕, 정기화 공저, 『방송과 시장경제』, 경희대학교 시장경제센터, 2006
- 유동운, “반자본주의 심리: 원인, 결과, 치유방안’에 대한 토론문”, 한국하이테크소사이어티 편, 『기업가 정신, 어떻게 살릴 것인가?』, 제6회 자유주의 정책 심포지엄, 2008, pp.70-74
- 전용덕, “실업자 노조 가입 안된다”, 자유기업원, Viewpoint, 2008. 5. 29
- 전용덕, “화물연대의 집단행동: 오류, 원인, 그리고 과제”, 한국 하이테크 소사이어티 편, 『기업과 정부』, 평민사, 2004
- 전용덕, “백태열의 ‘문화비판’을 읽고”, 『emerge 새천년』, 2001, 5월호, pp. 195-203
- Hoppe, Hans-Hermann, *Democracy: the God that failed*, Transaction Publishers, 박효종 역, 『민주주의는 실패한 신인가』, 자유기업원, 2001
- Hofstede, Geert, *Cultures and organizations, software of the mind*, McGraw-Hill, 차재호·나은영 공역, 『세계의 문화와 조직』, 학지사, 1995
- Hayek, F. A., *New Studies in Philosophy, Politics, Economics and the History of Ideas*,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8, 민경국 편역, 『자본주의냐, 사회주의냐』, 문예출판사, 1990
- Herbener, Jeffery M., “Ludwig von Mises and the Austrian Economics”, *The Review of Austrian Economics*, vol. 5, No. 2(1991), P.33

Jeon, Yoong-Deok and Young-Yong Kim, “Conglomerates and Economic Calculation”, Quarterly Journal of Austrian Economics, vol. 7, No. 1, Spring 2004, pp.53-64

Rothbard, Murray N., *Man, Economy, and State*, Ludwig von Mises Institute, 1993. 라스바드, 머레이, 『인간, 경제, 국가』, 전용덕, 김이석 공역, 나남출판, 2006

\_\_\_\_\_, *Power and Market: Government and the Economy*, Ludwig von Mises Institute, 1970

\_\_\_\_\_, “The End of Socialism and the Calculation Debate Revisited”, The Review of Austrian Economics, vol. 5, No. 2, 1991, pp.51-76

 Abstract

## The Anti-Capitalism In Korea

Young-Deok Je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e the causes and consequences of anti-capitalism. In addition, it suggests some measures against such anti-capitalism which affects negative impact on our society in the long run. Pro-capitalism or anti-capitalism of a society is the most important thing among many factors to determine the long-term economic performance of firms and an economy. Unfortunately, current anti-capitalism of our society seems to go beyond a break-even point. The fact that long-term economic growth rate of our society has been continuously falling shows that point well. We expect that the result of this study should be utilized to develop pro-capitalistic mentality and institution.

Keywords: Anti-capitalism, Government, Individual, Economic Growth, Interventionism